



메르스 공포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박근혜의 무능 · 무책임한 대응 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관련 기사 3면



4·24 총파업 평가와 전망

8~9, 10~11 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특별기고

메르스 공포

3 면

공무원연금
삭감 반대 투쟁
평가와 과제

4~5 면

동아시아 불안정과
제국주의

16 면

노동자 계급
투쟁의 이슈들

12~15 면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

7 면, 온라인

누구의 말일까요?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 외에 다른 나라로 보낸 적 없다.”

미 국방부 대변인 스티브 워런, 이후 호주와 캐나다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샀다

질병관리본부: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이 책임져라”

최초 감염자의 정부 기관 내 “뺨” 때문에
미처못해 검사해 주는 와중에도
빠져나갈 구실부터 찾은 질병관리본부

“정부가 메르스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유체이탈도 정도껏해야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 없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올 여러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남경필의 느긋한 마인드컨트롤

“행사 관련 전화 문의가 오면 행사가 어제부로 끝나 전부 철수했다고 이야기하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날
워크숍 겸 운동회를 개최한 것이 알려질까 봐
질병관리본부가 내린 공지

“[가정 폭력의 원인으로]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황교안이 2004년 부산지검 차장검사 시절에 한 말

“청문회 할 때마다 야당에서는 후보자에게 ‘5·16이 혁명이나 쿠데타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혁명을 혁명이라고 말도 못 하느냐.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 되는 것이다. 그날 5·16 거사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국 근대화, 복지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새누리당 김진태, 쿠데타는 쿠데타일 뿐

“민간잠수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자신의 장비를 사용했어요. 정부로부터 마스크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던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의 폭로

“오늘도 역시 아무도 인사를 받아 주지 않았다.”

“1분이 10분 같고, 10분이 100분 같이 느껴진다. 자기네들끼리 점심식사하러 가면서 어느 누구하나 같이 가서 먹고 하는 사람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포스코 사내하청 업체
이지테크 분회장 양우권 열사의 일기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김지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중 리스트, 정윤희 문건 유출 등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여러 사안을 무마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더 하라며 돌려보냈다.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황교안 지시로 대대적 유병언 검거 쇼가 시작됐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성완중 리스트가 터지자 사면 논란으로 몰타기를 시도하더니 결국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몸통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등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황교안은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란 악명에 걸맞게 직접 공개 변론을 맡으며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이후에도 반국가·이적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국가보안법 강화 계획과 공안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계획을 내놓아 박근혜를 흡족하게 했다. 황교안은 검찰을 총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지만 검찰 연루 정황이 제기된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때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시도처럼 법무부장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탄압들은 계속 벌어졌다.

친기업·반노동·반민주 전력

황교안의 그간 행적은 친기업·반노동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방향에 꼭 어울린다. 검사 시절 황교안은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면 숨어 있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원칙은 권력자들 앞에서는 무더졌고, 진실은 감춰졌다.

2005년 ‘삼성 X-파일’이 폭로되자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은 판도라의 상자를 뒀는 데 앞장섰다. 삼성이 대선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과 주요 보직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련한 내용이 밝혀지자 이 사회가 발각 뒹뒹어졌다. 그런데 황교안은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등 핵심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삼성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 <중앙일보>는 황교안을 그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자본주의·우파정부 수호자 황교안 지명은 박근혜의 공안통치 선포다.

최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맹희와 이건희의 상속분쟁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건희 변호를 맡았을 당시에 황교안이 태평양에서 상속 관련 수임을 맡았던 점 등을 들어 검사 퇴직 후 이건희 변호사로 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황교안은 민주적 시위와 노동자들의 저항에 관해서 줄곧 적개심을 드러내 왔다. 2002년 집회와 파업 주도 혐의로 민주노동당 위원장이던 단병호 전 의원을 구속한 것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법’ 행동을 이끌었다며 차봉천 초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속한 것도 황교안이었다. 그러나 1999년 대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는 특검팀에 검찰 몫으로 파견돼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

황교안은 2008년 촛불 시위를 두고

도 “밤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고” “사회적 손실이 3조7,500억 원에 이른다”라고 비난했다. 2009년 용산참사에 관해서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을 원인으로 꼽았다(<집회시위법 해설>). 이런 가치관을 가졌으니 4·19혁명은 “극도의 사회혼란을 틈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공작 활동이 강화되고 남한에 잠재해 있던 좌익·좌경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한 계기라 평가한 반면 박정희의 5·16쿠데타는 “군사혁명”(<국가보안법 해설서>)으로 보이는 것일 게다.

황교안은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 존치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종북 세력이 많아졌다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황교안은 국

황교안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친정체제 강화 시도는 박근혜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꺼내든 카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싸워야 하므로 박근혜는 탄압에 능한 강성우파 인물 중용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공안통 황교안을 국정 2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는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만성화가 돼 가는 듯 보인다. 최근 당청 갈등은 지배계급의 정치 권력 중심부에서 상시적 분열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대권 주자로 꼽히는 자들이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는 박근혜의 통제력에 대한 의심을 낳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 갈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확실한 친박 인사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기춘 키즈”로까지 불리며 박근혜 정부 수호에 앞장서 온 황교안은 위기에 처한 박근혜 입맛에 꼭 맞는 인물이다. 박근혜가 황교안을 두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총리 인

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2005년에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한국전쟁에 관한 학술적 의견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2013년에도 ‘현재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위험하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패·비리 우파 엘리트

박근혜 측근들이 예외 없이 부패했듯이, 황교안도 부패·비리 의혹투성이다.

황교안은 2011년 검찰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무려 16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에만 태평양에게서 급여와 상여금을 합해 1억 원 가까이를 받은 것도 최근 밝혀져 ‘보험금’ 의혹이 일고 있다. 황교안은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19건의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와 탈세 등등의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그뿐 아니라 면제 확률이 91만분의 1이라는 만성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심지어 질병 판정이 나기도 전에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폭로됐다. 총리 지명 3일 전에서야 부라부라 딸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알려지며 탈루 의혹도 일고 있다. 장관 업무추진비를 49만 원으로 맞춰 사용한 것도 미심쩍다. 50만 원부터는 동석자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니까 이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자가 “부패 척결의 책임자”라니, 가당치도 않다.

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박근혜에게 이미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낙점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친정 체제 강화는 권력 다툼을 낳아 내부 균열을 키울 위험도 있다. 과거 다른 총리 후보자들처럼 황교안이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다면 박근혜는 더 한층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공안통이라는 이유로 황교안을 낙점했겠지만, 노동운동은 바로 노동운동을 겨냥한 공안 통치를 좌절시키기 위해 황교안 총리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150호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www.wspaper.org

★ 스페인: 포데모스의 약진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민영화 추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포스코 사내하청 이지테크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포스코 이지그룹

★ KT노조 조합원들이 정윤모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리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 8년의 기다림과 뻘뻘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 출입국 규제 강화하고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년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의사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의 메르스 환자는 벌써 41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4명이다. 환자 수로만 보면 3위로 한국은 이제 무슨 중동의 나라가 된 듯하다.

정부는 초동 대응을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께 ...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말로는 그야말로 너무 미흡하다.

정부가 초동 대응 조치로 한 일은 메르스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 8층 병실 하나의 환자와 가족들만 격리한 것이었다. 물론 그것도 제대로 못 했다. 그 가족 중 한 명이 홍콩을 거쳐 중국까지 갔다.

정부가 나머지 환자들을 방치한 후, 평택성모병원의 8층 병동이 소개, 즉 비워졌다.(누가 소개시켰는지 정확한 정보는 정부가 알리지 않고 있다.) 입원한 환자들은 당연히 다른 층의 병동이나, 지역의 다른 병원으로, 그리고 좀 더 먼 병원으로 옮겨 갔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2차 감염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3차 감염자들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환자를 지역에, 아니 전국에 흩어 놓은 꼴이다. 이게 정부가 한 일이다.

사실, 평택에서 일어난 일은 지극히 일상적이다. 이른바 최초 환자는 병이 잘 낫지 않자 동네 의원, 동네 병원, 용하다는 서울의 의원을 다 들렀다. 그리고도 잘 낫지 않자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병원으로 갔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는가? 또 평택 시민들은 언제나처럼 똑같은 생활을 했을 뿐이다. 아, 옆 병실 사람이 무슨 이상한 병에 걸려서 병실을 폐쇄했으니 우리는 다른 층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니 다른 데로 갔다. 평소처럼. 똑같이.

다만 이번에는 운이 지독히 없었을 뿐이다. 내가, 옆 병실에 입원한 사람이, 위층 병실에 입원한 사람이 하필 메르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에 걸린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정말 운이 없었을 뿐인가? 메르스(2015년)는, 그리고 사스(2002~3년)는, 신종플루(2009년)는, 또 에볼라는 세계화된 시대에는 언제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병일 뿐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나날이 지내는 일상 아래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심연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만일 평택성모병원이 ‘평택시립병원’이었다고, 그리고 그 병원에 격리 시설과 격리 병동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8층의 나머지 병동 환자들은 아마 격리 병동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또 최소한 평택 지역에 있는 병원 6곳 중 하나만이라도 ‘평택시립병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환자를 성모병원에서 내보낸다 해도,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택시립병원으로 옮겨서 격리 병실에서 보호하지 않았을까?

평택에는 병원이 6곳 있다. 그러나 공립병원은 하나도 없다. 안성이나 화성까지 가도 마찬가지다. 그도 그럴밖에, 우리 나라 국공립병원은 대학병원까지 다 합쳐 봐야 병원 수의 6퍼센트 즉 20곳 중에 1곳밖에 안 된다. 병원 10곳 중 공립병원이 7~8곳이라는 OECD 평균은 넘어 가자. 공공의료가 밑바닥이라는 미국이나 일본도 국공립병원은 10곳 중에 3곳은 된다. 엉망진창이라는 미국의 의료조차 최소한 3~4곳 중에 1곳은 공립병원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보다 못한 한국은 도대체 뭘가? 시립병원들이 돈도 안 되는 읍읍 격리 병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리 없고 설사 몇 개 가지고 있다 해도, 이상한 병이 돈다고 병실이나 병동을 선뜻 내줄 리도 없다. 환자들은 알아서 제 살길을 찾아야 하고 혼자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진 출처: 장영대

집권 이래 최대의 반감을 사고 있는 박근혜.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이 일상이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 왔다.

일상이 메르스를 만나 그 민낯을 드러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병상이 2배나 되는 병원 과잉의 나라다. 그런데도 정작 감염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격리 병상은 없다. 어느 정도 없나. 지금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40명이 겨우 넘었을 뿐인데 서울의 국가중앙병원 급 격리병실부터 채우기 시작해 전국으로 환자들이 퍼져 있고 의심 환자들은 들어갈 병실을 찾아, 입원하려는 병원에 연락도 안 하고 쳐들어가고 있다. 이미 더 이상 환자 받을 여력이 있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 환자 40명 때문에 ‘국가 재난’이 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숨어야 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였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볼드모트 병원

요즘 한국에서는 병원 이름을 알아도 그 병원 이름을 못 부른다. 홍길동의 비애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새로 발생한 병원은 6곳이라는 정도다. 이 병원들을 따져 보자. 이 병원 6곳 중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평택성모병원은 휴원을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메르스에 걸린 의원 2곳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평택에서 서울까지 거리만큼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한 도시의 병원 2 곳은 각각 병원 격리 또는 병동 격리 상태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6곳 중 5곳이 격리됐다. 그런데 최근 며칠째 가장 많은 새로운 3차 감염자가 나오는 병원인데도 격리되지 않은 병원이 있다.

나 홀로 격리되지 않은 이 병원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이고 우리 나라 1위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병원. 말하자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빌어 “볼드모트” 병원

으로 부르기로 하자.

문형표 장관은 6월 2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브리핑 하면서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 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감염이 발생한 병원이나 병동 전체를 격리”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6월 3일 메르스로 확진된 의료진이 나왔고, 6월 4일 또 환자 중 감염자가 나왔는데도 이 병원은 여전히 격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볼드모트 병원은 국가에서 제외된 것일까?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 재벌은 진정 ‘어둠의 마왕’(내 표현이 아니라 해리 포터 시리즈의 표현이다)이어서 ‘X파일’ 사건이나, 반도체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등 그 수많은 사건과 사태에서 특권을 누리고 법 위에 군림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이 직접 걸려 있는 메르스 사태에서조차 특권을 누리는 것일까?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서만은 자본주의 사회라도 예외적으로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천만에. 재벌 병원은 메르스에서조차 예외다. 이것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이다.

노동자

재벌 병원은 메르스에서도 열외지만 노동자는 이 와중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은 불만에 떨면서도, 지하철 속에서 노동자 동료들과 ‘밀접 접촉’을 하면서, 서로의 침과 콧물과 숨길을 나누면서 공장에 나가야 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한다.

또 감염 위험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부딪치는 것도 병원 노동자들이다. 그 몇 곳 안 되는 국가지정 격리 병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의 노동자들이 지금 이 사회의 마지막 숨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에서 제대로 보호나 받을까?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지정 격리 병실이 있는 이른바 국가중앙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된 장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방호복이 모자라 국립의료원

(여기도 물론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는 병원이다)과 서울대병원이 이를 나누어 가지고 있단다.

그런데 메르스 발생이 13일이 지나 처음 연 청와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까지의 환자 수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고 또 한 번의 ‘유체이탈’도 선보였다. 1천 개가 넘는 학교가 휴업을 하는 상황까지 온 이 마당에 누가 대처를 못 했다는 건가. 노동자가? 아니면 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 자본주의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전염병을 막고 있다. 앰블런스 노동자들이 방호복도 없이 환자를 급하게 병원에 옮기고 봤더니 그 환자가 메르스 환자였다는 ‘기막힌’ 사실은 너무나 자주 벌어진 일이라서 사실 기가 막히지도 않는다. 이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와 서민을 지키는 것은 저들 자본가들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자와 서민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

메르스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됐다. 그러나 이 ‘비상사태’는 발터 벤야민의 말을 빌리면 “예외가 아니라 상례다.”(역사철학테제 8번째, 1940). 우리는 언제나 비상사태를 살아왔다. 단지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본주의라는 심연이다. 메르스라는 ‘비상사태’는, 이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윤에만 관심이 있을 뿐 노동자와 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살짝’ 보여준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말이다.

저들의 국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와 민중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벤야민은 말한다. 우리의 임무는 “진정한 비상사태를 도래시키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동자·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다 메르스 의심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된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센터 앞.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박천석(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이런 단순한 평가는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 다음 투쟁을 대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년의 투쟁을 잠정 평가하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나뉘 정리해 본 것이다.]



11월 1일 12만 명이 참가한 총궐기 대회 이 날 집회에 참가한 한 지부장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분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박한 과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 자체가 깊어지는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의 다급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근혜는 ‘철밥통’ 이데올로기 공격에 취약한 공무원 노동자를 먼저 공격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동력’ 삼아 공공 부문이라는 ‘킹핀’을 쓰리프리트겠다는 것이다. 형편없는 복지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그나마 인간다운 후후를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은 “비정상”적 특혜라고 공격하기 쉬운 먹잇감이었다.

먼저 국민연금과 비교해 너무 많이 받는다면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이간질했다. 이간질의 목적지는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었다. 공무원연금 주느라 국가가 무너질 듯 총당부채 수백 조 원을 들먹이며 재정위기 공포심을 부추겼다. 기업과 부자 감세로 생긴 재정적자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술수였다. 2008년처럼 개악 논의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면 제대로 개악할 수 없다며 법을 바꾸기도 했다. 임금(연금)을 삭감하면서 대화 상대로도 삼지 않겠다니 노동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박근혜는 2014년 ‘연내 개악’을 강조했다. 빨리 개악을 완료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박근혜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은 줄줄이 예정된 공격의 시작일 뿐이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14년 초, 박근혜는 집권 1년 차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보낸 직후였다.

임기 첫 해는 주요 관료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부패추문에 휩싸였다. 곧이어 국정원 게이트로 비틀거렸다. 우파 지지층을 결집해 전열을 정

비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꺼내든 전교조 법외노조화 카드가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저항의 바통은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저지’ 파업이 이어받았다. 철도 노동자 투쟁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박근혜는 곧바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였지만, 그조차 세월호 참사에 직면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새정치연합은 개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집권 시절 똑같은 논리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기초연금 사기극에서 공동주연을 맡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방적인 개악만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은 ‘대화’한다며 공무원노조 지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사회적 합의’ 모양새를 만드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한편 저항하고자 하는 쪽도 만만치는 않았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는 잘 조직된 부문이었고, 개악에 대한 조합원들의 위기감과 분노가 높았다. 임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 태세

2012년 기준 최근 7년 동안 생활물가는 25.5퍼센트 오르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40.2퍼센트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은 수당을 모두 합해 겨우 13.4퍼센트 올랐다. 박근혜를 포함한 최근 세 정부를 거치며 ‘민관보수수준 격차’는 더 커졌다. ‘고통 분담’ 운운하며 빼앗은 임금을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쓴 것도 전혀 아니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져야 쌓였다. 2년 전,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건 총회 투쟁에 5만여 명이 모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미래 임금인 연금까지 훔쳐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투쟁 호소에 응할 태세가 돼 있었다. 2014년 1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총파업 및 연가 파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0퍼센트에 달했다. 참여하겠다는 비율도 무려 61퍼센트였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이 개악안을 처음 발표한 국회 토론회는 조합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첫 전투에서의 승리는 사기를 높였다. 지역별로 개최하려던 설명회도 항의 행동에 부딪혀 줄줄

이 무산됐다. 이런 분위기의 절정은 11월 1일 총궐기였다.

12만 명이 참가한 11월 1일 총궐기 뒤에는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퍼센트로 늘었다. 민주노총·전교조 선거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좀 더 적극적인 좌파 집행부가 당선됐다.

불과 반 년 사이 세 차례 대중 집회에 연인원 20만 명이 참가했다. 공무원노조는 십 년 만에 1백억 원 투쟁기금 모금도 성공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주요 요구 중 하나로 내걸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교조도 연금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9년 만에 연가 투쟁에 나섰다. 이런 압력 탓에 온건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조차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관련 노조들이 모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도 만들었고, 노동조합들과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라는 연대 기구도 결성됐다. 지역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운동본부’가 민주노총 총파업 선봉대 구실도 하면서 연대의 기반을 만들기도 했다.

요컨대 투쟁의 잠재력과 승리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투쟁의 동력이 빠르게 커지던 11월에 공무원노조 이충재 집행부는 한 걸음 전진하기보다 뒤로 물러섰다. 현장 활동가들의 투지를 억누르며 조합원들의 분노와 잠재력을 협상장에 들어가는 열쇠로 이용했다.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

이 시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분열이 있던 시기였다. 박근혜 측근 비서관 3인방과 비서실장 사이에 권력 암투설이 불거졌다. 경제 위기 책임 전

가가 순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열이었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저항할 태세를 보여 주자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당사자 배제’ 입장에서 물러나 대타협기구를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내부 분열을 낳을 위험이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새정치연합에 내 줄 수 밖에 없었다.

이때 공무원노조가 박근혜의 강경자세와 그 이면의 약점을 잘 이해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조직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12만 명이 모인 총궐기에서 공무원노조 위원장인 이충재는 이후 투쟁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모이기만 해서 되겠는가. 뭔가 더 행동을 보여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합원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반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려 애썼다. 당시 이충재 위원장은 방송에 나와 ‘개혁은 필요하다’는 등 ‘공무원이 연금을 많이 받기는 한다’는 등 거둬 양보 제스처를 취했다. 공투본의 “연금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슬쩍 양보안을 담은 것도 이 때였다. 소득상하한제 등 더 큰 개악안인 ‘김진수 안’에 “고개를 끄덕인” 공무원노조 집행부나, “고통 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는 공노총 지도부나 매한가지였다.

‘투쟁과 협상’ 두 트랙을 외쳤지만 경협 있는 현장 활동가들의 눈에 이런 태도는 투쟁을 회피하려는 것임이 명백해 보였다. “총파업”을 말하면서 ‘양보안’을 만지작거리는 지도부를 누군들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충재 집행부는 “11월 총궐기 이후 현장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식혔다.



새정치연합은 처음부터 개악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들을 믿고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전장에 뛰어드는 꼴이었다.

보이노자

평가와 과제

이총재 집행부는 어떻게 투쟁의 불씨를 꺼뜨렸는가?

이총재 집행부가 이렇게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며 양보 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반발도 컸다. 12월에 열린 지부장단 토론회에서는 현장 간부들이 이총재 집행부의 양보 제스처에 반발했다. 특히, 전국에서 모인 지부장들은 집행부의 모호한 투쟁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두 차례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이총재 집행부는 이를 실질화할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새정치연합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양보 제스처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이총재는 “파업은 결정적일 때 칼을 빼는 것이다. 아무 때나 칼을 빼서 휘둘러 수 없다”고 거들먹거리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반발 때문에 이총재 집행부는 양보 테이블에 쉽게 앉지 못했다. 새로 선출된 전교조 변성호 집행부도 양보 협상에 반대하자 이총재 집행부는 꽤 커다란 압력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제시한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노조는 참여했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한 논의 기구였음에도 이총재 집행부는 ‘시간 벌기용 참여’, ‘우리 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 탈퇴’ 등 믿기 어려운 말로 둘러대며 참여했다.

공무원노조 내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는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개악을 전제로 한 협상 테이블이자 들러리 기구인 대타협기구 불참을 호소했다. 전교조 변성호 집행부도 대타협기구 불참을 호소했다. 결국 이총재 집행부의 대타협기구 참여는 배신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 대타협기구 참가 이후에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내 투사들은 탈퇴를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호소했다. 특히, 2월에 열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자’는 사업계획 수정안은 예상을 깨고 140여 명이 발의해 76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집행부가 파업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도 의미 있는 수의 대의원들이 투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수정안은 ‘파업 안하려는 이총재’에 맞서 ‘진짜 파업하자’는 의미였고 그래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대변한 것이었다.

배신으로 가는 “첫걸음”

시간이 흐를수록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임이 드러났고 결국 대타협기구 마지막 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과 다름없는 개악안을 내놨다.

그러나 “들러리 세우면 언제는 빠지겠다”던 이총재 집행부는 탈퇴해야 마땅할 때 스스로 ‘들러리’를 자처했다. 공무원노조 김성광 사무처장을 포함한 공투본 소속 대타협기구 참여위원들은 오히려 “고통 분담”에 동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수넷’은 국회 대타협기구 회의장에서 팻말을 들고 공무원노동자들은 “고통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3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는 공무원



실무기구 참여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3월 28일.

노조와 전교조 내 투사들이 이총재 집행부에 항의하는 팻말 시위를 했다.

당시 대타협기구는 최종 합의된 개악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무기구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총재는 이번에는 공노총과 교총이 합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참여를 정당화했다.

여야가 약속한 국회 처리 시한이 다가오던 4월 중순, 세월호 항의 운동이 다시 거세졌다. 성완중 게이트가 터졌다.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총재 집행부는 이 기회에 실질적 투쟁을 배치하기는커녕 공무원연금 개악이 4월 국회를 넘길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을 내세우며 투쟁 회피를 정당화했다. 한 달 전에는 정부가 너무 강력해 싸우기 어렵다더니 말이다.

집행부가 김을 빼고 책임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현장 투사들은 헌신적으로 투쟁을 조직했다. 탄압 속에서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출근 집회, 중식 집회, 교육 등의 방식으로 비상총회를 진행했다. 상당수 간부들이 지역별로 열린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개악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김빠지는 소식에도 조합원 1천여 명이 5월 1~2일의 노숙 농성에 참가했다.

이총재 집행부는 바로 그 시간에 조합원을 배신하고 여야 야합안에 서명했지만, 직후 열린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이하 총투본)에서 합의안은 거부됐다. 그러나 지역본부장들이 중심인 총투본은 우왕좌왕하며 새로운 지도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양보 합의에 책임지고 사퇴

하겠다면 이총재는 사퇴를 번복하고 노동조합을 마비시켰다. 그 뒤 한 달 동안 공무원노조는 혼란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5월 2일 여야 합의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청와대의 강경 태도 때문에 5월 말로 연기됐다. 박근혜는 ‘어음’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조차 삭제를 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사이 이견으로 마지막 투쟁의 기회가 돌아왔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총재의 회방과 총투본의 주저와 망설임으로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그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 이총재는 도리어 조직적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국회에서 개악안 통과를 요구했다. 배신의 명분으로 내세우던 국민연금 개선 약속이 빠져 버렸는데도 말이다.

결국 ‘공적연금 강화’는 공수표일 뿐이라는 활동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이라는 현금을 내 준 이총재 집행부는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게다가 이총재 집행부는 수 차례 본부장들과 지부장, 조합원들을 속여가며 개악안에 합의했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내던지고 공무원연금 사수와 총력투쟁을 결의한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을 배신한 것이었다.

노동조합 관료는 조합원들의 투쟁보다 자신의 협상 수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총재는 그 전형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큰 정치적 판돈을 걸었던 만큼 노동자들도 강력한 투쟁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총재 집행부는 그런 전면전을 두려워하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받아들이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얻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배신적 타협을 한 것이다.

현장조합원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일부 본부장들과 좌파 활동가들은 이총재 집행부가 양보제스처를 취하며 대타협기구에 매달리는 것 때문에 투쟁 조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 독자적 행동구축보다는 총투본 등 공식 논의체계에서 이총재 집행부를 설득 또는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이런 약점 때문에 이총재 집행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파업 등 투쟁을 조직하도록 실질적인 압력을 넣지 못했다. 또 일부 활동가들은 공무원연금 사수를 위해서는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배수진을 치는데 주저했다. 이총재 집행부는 이 점을 파고들어 양보는 불가피하다며 조합원들의 투지를 떨어뜨렸다.

이런 때 현장 노동자들은 상층 지도부의 배신과 무능을 보며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사기저하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조직된 현장 투사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지도부에 압력을 넣거나 때로는 독자적인 투쟁 조직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수였지만 이번에는 ‘사수넷’이 그런 구실을 해보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초기에는 지도부와 독립적으로 개악의 본질을 폭로하고, 정부와 우파들의 철밥통 논리, 이간질, 재정 절감 과장하기 등을 반박했고, 사회적 합의 기구의 문제점과 이총재 집행부의 대타협기구·실무기구 참여를 비판하며 활동가들을 규합하려 했다. ‘대타협기구 탈퇴 및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연서명 조직도 발의했다. 5.2 여야 합의안에 서명한 이총재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이 뻔뻔하게 공식적 활동을 못하게 항의 행동을 지속했다.

민주노총과 연금행동의 5.2 여야 합의안 지지 움직임에도 동료 활동가들과 협력해 논쟁하고 항의했다. 특히, 5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도록 노동조합 공식 기구가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사수넷’은 국회 앞 2박 3일 항의 농성을 결정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부장들을 조직했다. 그동안 ‘사수넷’은 대대 수정안 발의를 포함해 수차례 각종 연서명을 조직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투사들 사이에 느슨한 연결망이 생겨났다. 그래서 누가 이런 호소에 귀를 기울일지도 알고 있었고 신속한 조직도 가능했다.

연결망

불과 몇 시간 만에 지부장 십여 명이 항의 농성 제안자로 나섰다. 소수지만 투사들이 단단한 구실을 만들고 농성을 제안했다. 곧이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국회 앞 2박 3일 농성을 결정했다.

물론 2박 3일 항의 행동과 결의대회만으로 개악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국회 앞 항의 행동의 정치적 의미는 컸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고통분담’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5월 2일 합의안 서명을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던 여야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줬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며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던 이총재의 회방도 무력화시켰다. 미끼에 불과한 ‘공적연금 강화’ 약속에 매달리면서 정작 공적연금의 일부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한 개혁주의자들의 모순도 드러났다. (관련 기사 6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자유주의 언론이 표방하는 ‘진보 개혁’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도 보여 줬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니 “첫발 댄 공적연금 개혁”이라느니 하며 환영 사설을 실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타협과 동의를 필수적”이라는 〈경향신문〉이나 “관련 단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한겨레〉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 말고 도대체 누가 고통을 ‘분담’했다는 얘기인지 알 도리가 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끈질긴 저항은 이들 자유주의 언론이 “노동자 계층의 대변지”(〈한겨레〉)는커녕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현장 투사들은 지도부가 투쟁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이 있음을 몸소 깨달았다. 비록 이번에는 그 힘이 충분치 않았지만 말이다. 소수라도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인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끝까지 이행하려고 했기에 이총재의 변명은 완전히 정당성을 잃었고 그를 사퇴시킬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 저지 투쟁은 패배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임금피크제를 공무원부터 시작하겠다고 한다.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급을 무력화해 온 노동조합의 균등분배에도 칼을 대겠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초과근무수당 공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당장 징계, 고발 등 노조 탄압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사수넷을 통한 현장 투사들의 공동 활동은 이후 투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투쟁할 때 지지하지만 동요하거나 후퇴할 때는 이를 비판하고 독립적 투쟁을 촉구하고 조직할 현장 조합원들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김문성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놔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소위원회를 맡은 상임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 시행령은 ‘협의·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관료 중에서 임명한 행정지원실장이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실무기구를 감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는 안전사회국의 활동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자료) 분석’으로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안전사회기획과와 보고서 작성과를 신설해 특조위의 임무가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사회추구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물론 시행령 전부개정을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 투쟁이 계기가 된 국회법 개정에 3권 분립 위배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여당 내 갈등도 불

사하면서 말이다.

가히 ‘유신 스타일’의 ‘시행령 정권’답다. 박근혜 정부는 여당이 국회 과반인데도, ‘국민적 논의’의 장이라 불리우는 국회 논의조차 불편하게 여겨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에 의존해 개악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행령을 손봤다. 국가정보원이 판사 임용에 개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3권 분립을 무시해 온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다.(3권 분립은 애초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비선출 집단이 선출직을 견제하려고 고안된 제도로 노동계급에게 반드시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수사권·기소권 같은 권한도, 인적 구성의 독립성도 충분하지 않은 반쪽 조건에서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압초에 부딪힐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쓰레기 시행령이 통과된 후, 유가족들을 포함한 4·16연대는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 조사기구가 의혹 제기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누구도 확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을



노란 풍선 5월 3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이면서도 여전히 국가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필요성은 남는다.

첫째, 국가는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으로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사회 전체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를 통해 실질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국가를 압박해 그것을 매개로 우리 운동의 요구를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정당하다.

강제력 있는 수사권 보장과 책임자 처벌 등은 현실에서 국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대상이 바로 국가다. 규제 완화, 민영화, 정경유착 부패 등으로 참사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 왔다. 또한 구조 실패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의 구조 능력 약화가 누적돼 왔고 박근혜 정부도 컨트론타워 구실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국가기관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민간이 강제할 수 있을까? 역설이게도 국가기관의 혐의는 (혁명의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기관의 힘을 통

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살인 사건, 노태우 정권의 강기훈 누명 사건을 사법부가 재심해 ‘무죄’로 판결한 것이 그 사례다. 광주 학살과 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도 결국 국은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단죄했다.

셋째, 국가와 정치의 문제를 ‘국가주의 반대’, ‘대중의 직접 정치’ 등의 이름으로 회피할 수 없다. 지배계급은 이윤지상주의를 문제 삼고 박근혜 정부에 도전하게 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불편하게 여긴 지 오래됐다. 노동절 시위 때 봤듯이, 상당한 수준의 국가 폭력이 이 운동을 향해 벌어졌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에게도 소환장 발부 등 법적 협박이 이뤄졌다.

운동이 굳건히 유지되려면, 정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를 무시하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도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등에게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대중투쟁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특조위가 정부의 진실 규명 방해에 맞서 계속해서 싸우도록 독려·압박해야 한다.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은 이런 전체 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때 나름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시행령만이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투쟁도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김문성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을 맞바꾸려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부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최종 통과 때까지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독단으로 합의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위원장·사무처장은 공식 기구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노조를 탈퇴했다.)

게다가 최종 통과된 ‘여야 합의안’에는 공무원연금 삭감의 반대 급부로 여당이 ‘약속’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빠졌다. 연금 개악 사기극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의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일은 정의당 지도부가,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령,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조승

수 의장 명의로 낸 논평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길] 재정 절감분은 향후 70년간 총 3백33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기금 불안정성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그 의의를 인정한다.

그런데 국회 표결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기권(심상정, 박원석, 김제남, 정진후 등은 기권, 서기호는 찬성)을 선택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과 전교조, 민주노총이 개악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2박 3일 농성에 들어간 것에 압력을 받은 듯하지만, 공무원연금 개악 필요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편, 노동당은 5월 23일 전국위원회에서 특별결의문(“기초연금 두 배로,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 하나로 평등한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 실현하자!”, 이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퍼센트(현재 물가로 40만 원 수준)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결의문’은 “공무원노조에서 연금수령액의 하향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공무원노조가 “2천1백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와 ‘용돈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삭감을 내 주고 국민연금 개선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일단 사실도 아니다.

노동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규탄하는 논평조차 내지 않은 것에 비춰 보면, ‘결의문’이 지향하는 공적연금 상향 계획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달리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으나, 실천적 결론은 마찬가지로 개악 용인인 것이다.

좌파는 사회연대전략의 발상에 반대해야 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복지 재원 부담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는 데다가 당장의 투쟁 수준에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모두 함께 더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해 노동계급도 재원 부담에 동참하자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그러나 나눔 같은 도덕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많은 경우 그렇듯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 경우엔 ‘계급 간 조화(협력)’일 것이다.

또한 지배자들의 재정균형 논리를 노골적으로 받아들여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보편 증세를 내

놓는 더 온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복지제도가 유용한 이유 하나는 그것이 계급 간 소득재분배 구실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편 증세’론은 계급 간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를 모호하게 한다.

또한 보편증세론으로는 노동계급 내부도 단결시키기 힘들다.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세금 인상에 동의할 노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도 증세에 동참하라는 압력은 노동계급 내 상대적 고임금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노동당 지도부 중 상당수

과 연관 단체인 좌파노동자회는 “공적연금 강화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의식해 개악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정당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개악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보인 것이다.

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해 왔다. 계급 간 복지 확대 대타협을 위해 노동계급 내 일부(상대적 고임금층)의 (국가와 기업주에 대한) 소득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의 본질이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49호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하시오.)

이런 발상은 경제 위기 시대에 노동계급의 투쟁 능력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계급 간 협력을 위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잘 조직된 부분을 고립시켜 복지 확대를 쟁취할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그리스

긴축에 맞서 계속되는 노동자 파업

데이브 수엘

5월 20일 수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의 집권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

병원 노동자들은 긴축으로 생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체불 임금 지급도 주요한 요구였다.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며칠 뒤 주말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항관리국 노동조합은 공항관리국이 긴축 탓에 “재정적 교살” 상태에 있다며 [적정한 재정과 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공항관리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공항 노동자들은 공항이 붐비는 오순절 휴가철에 맞춰 48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일부 양보해서 파업은 취소됐다.]

경제 위기 발발 이후 그리스 정부는 은행가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한테서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가혹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시리자는 지난 5년간 벌어진 파업과 저항 운동 덕택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시리자의 선거 승리는 긴축 정책에 대한 거부 표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IMF의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라고 시리자에 강요한다.

유럽연합과 IMF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그리스가 수락할 때까지 구제

금융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리스는 부채 상환을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하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상을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굴욕적 조건”은 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리스 내무장관 니코스 바우치스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에 그리스는 IMF에 부채를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지선

바우치스 장관은 [유럽 지배자들이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23퍼센트로 인상과 노동자 권리 공격을 거부했다. 시리자는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는 선거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피레우스 항구 같은 주요 시설의 민영화 중단은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시리자 협상단은 유럽 지배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급진적 공약에서 점점 멀어졌다.

5월 24일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4분의 3만큼 다가갔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향해 나머지 4분의 1만큼 다가와야 한다.”

그러나 5월 중순에 시리자 기관지 <새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시리자의 협상 전략에 대한 지지율이 54퍼센트로 떨어졌다.

응답자의 59퍼센트는 시리자가 긴축 정책을 더는 수용하지 않기를 원했



“해고자들 모두 복직시켜라” 5월 20일 병원 노동자 파업 행진에 참가한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들

다. 89퍼센트는 연금 삭감에 반대했고, 81퍼센트는 대규모 해고에 반대했다.

바루파키스와 치프라스는 유로존에 남아 있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애쓰는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유로존 잔류보다 금지선을 더는 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런 논쟁은 시리자 안으로도 반영됐다.

시리자 내의 [좌파적 의견그룹 네트워크인] ‘좌파 플랫폼’은 5월 24일에 열린 시리자 중앙위원회에서 6월 5일로 예정된 부채 상환을 거부하며 디폴트를 선언하고 은행들을 국유화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이 안건은 반대 95표, 찬성 75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그러나 시리자 지도부는 당내 좌파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다스릴 능력이 여전히 있다.

새 긴축 협상에 반대하는 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1월 총선 뒤 잠시 평온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최근 몇 주간 파업들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건재함을 알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455호
번역 박규경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시리자 정부의 패배는 좌파 전체의 패배를 뜻하는가?

차승일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큰 압력 속에 놓여 있다.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67억 4천만 유로(약 8조 3천억 원)에 이른다.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IMF로 최근에는 “관계 기관”이라고 불린다)는 그리스 전임 정부와 약속한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리자 정부에게 고강도 긴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2월 20일 유럽 지배자들과 시리자 정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일부 좌파는 시리자에 대한 비판을 일절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리자의 패배는 전체 좌파들의 패배”이므로 “시리자가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시리자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밑바탕에는 ‘막강한’ 트로이카가 곧 시리자 정부를 제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물론 혁명가들은 우파가 시리자 정부를 제거하려 할 때는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시리자 정부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를 방어할 때조차 비판을 삼갈 수 없다(무조건적이지만 비판적 지지). 시리자의 거듭된 후퇴가 운동 동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볼셰비키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볼셰비키는 영국·프랑스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에 타협하는 임시혁명정부를 비판하고, 러시아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1917년 8월(구력) 우익 장군 코르닐로프가 임시정부를 전복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볼셰비키는 아무 조건 없이 임시정부를 방어한 바 있다.

충돌

게다가 현실을 냉정히 보면 시리자 정부가 곧 제거될 상황인 것은 아니다. 우선 시리자 정부를 대체할 우파들의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 정치를 쥐락펴락한 중도우파

신민당은 선거 패배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강력한 대중운동에 막혀 파시즘이 조만간 권력을 잡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시리자 정부도 유럽 지배자들과의 정면 충돌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때때로 유럽 지배자들의 신경을 긁는 말을 하지만 지난 네 달 동안 시리자 정부는 유럽 지배자들의 요구에 거듭 후퇴했다. 부채 일부 탕감 주장은 만기 연장 요구로 바뀌었고, 민영화 중지과 연금 삭감 반대 등 시리자 정부 자신이 설정한 금지선(레드라인)도 무너졌다.

그러므로 시리자 정부는 곧 무너지기보다는 유럽 지배자들의 압력에 순치되며 서서히 우경화해 끝내는 사회당(PASOK)과 비슷한 보통의 개혁주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그리스 상황은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하고, 혁명적 좌파의 실천 방향도 장기적 관점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스의 앞날을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막대한 부채다. 그리스 정부는 7월에는 55억 7천만 유로, 8월

에는 41억 8천만 유로, 9월에는 29억 4천만 유로를 갚아야 한다. 그 뒤로는 갚아야 할 빚이 비교적 적지만, 그리스 정부는 2050년이 지나서까지도 해마다 1백억 유로씩 갚아 나가야 한다.

이 상황에서 시리자 정부는 빚을 모두 갚겠다고 했다. 그리스 경제 전망이 어두운 지금,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현실적 방안은 정부 지출 축소로 예산을 흑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 즉, 긴축의 지속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한 번 더 구제금융을 받을지 모른다는 예측도 나온다. 시리자의 정책으로는 그리스가 긴축의 늪

에서 빠져나오기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 운동이 시리자를 지지하는 것에서 멈추고 시리자 정부에 의존하면,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지도 못하고 쉽사리 사기 저하돼 결정적인 순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를 지지하는 노동자들과도 공동으로 투쟁을 벌이며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시리자 정부에 대한 환상을 깨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 정부에 독립적이어야 하고, 시리자의 전략이 왜 실패하는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추천 책

그리스 외채위기와 시리자의 부상

좌파 정부는 긴축을 끝낼 수 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스타티스 쿠펔라키스 외 지음
차승일 역음 | 232쪽 | 12,000원 | 책갈피

남은 상반기 투쟁을 위한 4~5월 투쟁의 교훈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김하영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 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년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조합원 교육, 심지어 간부들의 ‘파업’도 포함한 수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파업 참가 인원이 3만 7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파업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정부가 수치를 줄여 발표하는 것은 늘 벌어지는

일이지만, 민주노총의 파업이 이윤에 타격을 주면서 지배자들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는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공장을 멈추고 세상을 멈추는 파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에 비한다면 4·24 파업은 분명 그에 못 미쳤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의 활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취임 몇 개월 만에 조직한 파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그러저러 선반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위축했던 노동자 투쟁은 2~3년 전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여러 요인들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자신감을 충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한상균 선본

의 당선은 조합원들 스스로 투쟁에 나설 자신감이 높지는 않아도 다수 조합원이 ‘투쟁하는 지도부’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이것은 지도부가 단호하게 투쟁을 호소하면 조합원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과 함께, 해쳐 나가기야 할 장애물도 많은 상황임을 뜻했다. 박근혜의 파상공세 속에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투쟁 수준으로 치자면 민주노총 조합원 3분의 1이 참가한 하루파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기에, 이런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기기를 기대해야 했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는 4·24 파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투쟁의 도약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4·24 파업이 보여 준 가능성과 한계

이런 점에서 보자면, 4·24 파업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 줬다.

첫째, 총파업 시점을 4월로 잡고 일찍부터 투쟁 조직에 나선 덕분에 3~4월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노동운동이 주변화되지 않고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력 구실을 할 수 있었다. 3~4월은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논의되는 시기였을 뿐 아니라, 연초부터 지지율이 급락한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가 심각하게 표출된 때였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애초 공언한 시한인 4월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것은 주로 정부의 정치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투쟁에 시동을 건 것이 아래의 두 가지 사제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목해야 한다.

성완중 부패 스캔들로 이어진 사정 정국은 노동자들의 불만으로부터 시선 돌리기용으로 기획된 면이 있었다. 또,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의 투쟁 선언이 없었다면 한국노총 지도부는 산하 조합원들의 불만을 훨씬 덜 의식하고 노사정 협상을 결렬하지 않았을 수 있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함께 싸우자’고 공개 요구한 것은,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공격과 함께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큰 압력이 됐다.

사실, 파업 시기를 4월로 할 것이냐는 민주노총 지도부 내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정점이었다. 너무 촉박한 데다 과연 4월에 파업할 동력이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이 “선제적 파업”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투쟁 조직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했다. 만약 총파업 시기를 6~7월로 미뤘다면,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국면, 세월호 사형령 정국과 박근혜의 정치 위기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보듯이 입단형 시기라고 해서 총파업 동력이 자동으로 뿔뿔히뿔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상균 집행부가 정치 상황의 역동성을 충분히 이용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아쉬움도 조금 있다. 세월호 사형령 항의가 확대되고 성완중 게이트가 터졌을 때 이런 쟁점을 결합시키면서 투쟁을 확대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성완중 게이트는 새정치연합도 엮여 있는 사건이라 부르주아 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운동이 나서야 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주도하기를 주저했다. 정세는 역동적으로 전개되는데 민주노총은 기존 계획을 고수할 뿐, 4월 24일 파업 집회의 서울 강경대회를 확대하고 세월호 범국민대회로 연결하는 등 4·24 파업의 정치적 파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에 굼뻤아 한다.

둘째, 한상균 신임 지도부는 현장을 순회하며 파업 조직에 열의를 보였고, 좌파 활동가들은 이를 활용해 현장에서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일부 산별연맹과 대형 노조 지도자들의 비협조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 한상균 신임 지도부 당선 직후 아직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함께 싸우자’고 공개 요구한 것은,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공격과 함께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큰 압력이 됐다.

국민이나 중앙파 지도자들 상당수가는 민주노총 지도부 내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정점이었다. 너무 촉박한 데다 과연 4월에 파업할 동력이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이 “선제적 파업”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투쟁 조직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했다. 만약 총파업 시기를 6~7월로 미뤘다면,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국면, 세월호 사형령 정국과 박근혜의 정치 위기 등에 제대로 대응할

이불에 참가하고 있었다.

4·24 파업 전선을 위한투쟁에 만든 노조 지도자들도 여럿 있었다.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파업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지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파업 파괴자 구실을 했다. 이종시행령 항의가 확대되고 성완중 게이트가 터졌을 때 이런 쟁점을 결합시키면서 투쟁을 확대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성완중 게이트는 새정치연합도 엮여 있는 사건이라 부르주아 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운동이 나서야 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주도하기를 주저했다. 정세는 역동적으로 전개되는데 민주노총은 기존 계획을 고수할 뿐, 4월 24일 파업 집회의 서울 강경대회를 확대하고 세월호 범국민대회로 연결하는 등 4·24 파업의 정치적 파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에 굼뻤아 한다.

〈노동자 연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산하 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직접 호소하는 것과, 해당 노조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실질적인 투쟁 조직에 나서서 하는 것이 맞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24 파업을 강력하게 구축하려면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들에서 좌파적인 입장을 내놓고 관철시키는 게 매우 중요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한국노총에 공개적 비협조적이었고, 좌파 지도부로 분류되는 산별연맹들조차 모두 열의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 현장 발의를 통해서야 4·24 총파업 복무를 결정했고,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1차 적음 대상이 공공부문인데도 투쟁을 6월로 미뤘다. 심지어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을 결렬시킨 상황에 서도 기재부·노동부의 실무협의 테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공부문 2차 정성화 등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파업을 준비해 가야 한다 5월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래하게 무산시킨 정부의 임금피크제 공청회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대타협기구 참가와 공무원연금 양보에 대해 원칙 있는 입장을 표명하며 투쟁을 왼쪽으로 이끌지 못했다. 심지어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이나 4·24 총파업을 “역지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초를 친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4·24 총파업 울산 집회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저지른 지역실천단장 집단 폭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말”은 매우 중요하다. “말” 자체로도 중요한 무기일 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광범한 대중에게 받아들여져

물질적 힘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대학생 몇십 명이 내놓는 ‘말’이 아니라 잠재적 지지자 수십만 명이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이라면 노동운동의 항방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파라서 뜨거운 쟁점에 대해 좌파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운동의 방향을 이끄는 것은 한상균 신임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압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해지는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5월 투쟁과 정치적 취약성

셋째, 앞서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투쟁 조직에 나선 것의 의미를 지켰했다. 그러나 동시에, 선제파업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정부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후속 투쟁을 계획해야 한다. 이 점에서 4·24 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후속 투쟁 계획이 신속히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약점이었다.

선제파업은, 개악이 다 이뤄진 다음에 뒤틀 항의로 사태를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개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루파업으로는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하루파업을 성사시킨 자신감을 발판으로 이후 투쟁을 확대해 가야 했다.

물론 4·24 총파업 서울집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4·24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5월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와 6월 말 2차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재보선 직후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공부문 2차 정성화를 빠르게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 비해 보면, 5월 투쟁 계획이 비어 있었던 것은 약

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6월로 물 건너갔다’는 4월 말 당시 운동진영 내 팽배했던 잘못된 정세 전망의 반영이자, 공무원연금 방어에 나서기를 꺼리는 노동운동 내 상당히 퍼져 있는 경향의 문제점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5월 국면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둘러싼 정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떠오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4·24 파업의 의제를 결정할 때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주요 요구로 넣을 것인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공무원연금이 ‘특권’적이어서 방어하기 곤혹스럽다거나, 공무원연금을 사수하자는 입장으로는 다른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거나, 조직노동자 이기주의의 공세에 취약성이 드러나는 쟁점이라는 등의 주장은 민주노총 내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도 제기됐다.(이것은 정규직-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

비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이력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저력 4·24 파업의 주요 요구로 채택됐지만, 공적연급 강화와 공무원연금 사수를 대립시키는 약점은 민주노총 내에 잠복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나오자 민주노총은 동요와 혼란에 빠졌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비판하며 개악 저지 투쟁을 이끌어야 할 민주노총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두 개의 모순된 성명을 낸 것이다. 하나는 합의안을 규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합의를 이행하라는 성명은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를 정당화하고 힘을 실어 주는 효과를 냈다. 공무원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이 이종재-김성광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좌파 활동가들의 항의 속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두 번째 성명을 곧 삭제했지만, 그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고 동요와 혼란도 계속됐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 등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성의 있게 조직했다. 그러나 이런 동요와 혼란은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데는 분명 걸림물이었다. 전투성은 정치적 취약성에 연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지난해 말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도 한 쟁점이었다. 당시 한상균 선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를 토대로 공적연급 강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근 후보 측의 사회연대전력이 공무원연금 양보론(공무원연금 양보를 통한 공적연급 강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작 해나.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비판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5월 투쟁 계획이 없는 동안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약영향을 주는 일련의 배신적 타협이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 기아차 김종석 집행부의 사내하청 신규채용안 합의(기아판 ‘8·18 합의’)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에 대해 ‘직권조인한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이영주 사무총장의 5월 27일 국회 앞 농성집회 발언,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이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영훈 위원장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한 간부는 이 합의로 임금피크제와 성과 연봉제 등을 저지했다고 지켜세우기까지 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철도노조 좌파 활동가들이 부결 선봉까지 했던 인인

당시 한상균 선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좌파 활동가들이 돌아볼 점

〈노동자 연대〉는 민주노총 좌파 지도부의 등장과 총파업 선언을 노동자 투쟁의 일부 전진을 위해 활용하고자 주장했다. 이것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좌파 노조 지도자들과 협력해 투쟁을 성사시키고자 했는데, 좌파 지도자들이 잘 싸워 줄 것 이라고 믿고 의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섬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층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랬던 것이다.

놓지 않은 투쟁 수준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부문의 좌파 활동가들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설사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근시안적으로 보고 빨리 저쳐서는 결코 안 된다. 아직 상반기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길게 멀리 보고 참여성 있게 활동해야 한다. 당면한 기층 조직을 강화하는 왕도는 없다.

투쟁 속의 교훈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조합 내 좌파들은 4·24 파업을 통해 이런 저런 평가를 내놓고 대응이나 이경훈 집행부의 집단폭행 쟁의 주체가 될 것이라거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주장들

도 있다. 이런 주장은 대규모 사업장 정규 노동자들을 더는 투쟁의 중심이 아니라는 평가와 짝을 이루기도 한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요 세력이 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 비정규직 조직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령 이경훈 지부장의 파업 파괴 행위를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로 싸우자 매도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파업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경훈이 그것을 거스른 것이었다. 이는 노동조합 관료가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의 실리주의, 조합주의가 더 근저의 문제라는 식의 설명이

를 토대로 공적연급 강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근 후보 측의 사회연대전력이 공무원연금 양보론(공무원연금 양보를 통한 공적연급 강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작 해나.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비판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5월 투쟁 계획이 없는 동안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약영향을 주는 일련의 배신적 타협이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 기아차 김종석 집행부의 사내하청 신규채용안 합의(기아판 ‘8·18 합의’)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에 대해 ‘직권조인한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이영주 사무총장의 5월 27일 국회 앞 농성집회 발언,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이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영훈 위원장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한 간부는 이 합의로 임금피크제와 성과 연봉제 등을 저지했다고 지켜세우기까지 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철도노조 좌파 활동가들이 부결 선봉까지 했던 인인

당시 한상균 선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를 토대로 공적연급 강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근 후보 측의 사회연대전력이 공무원연금 양보론(공무원연금 양보를 통한 공적연급 강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작 해나.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비판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5월 투쟁 계획이 없는 동안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약영향을 주는 일련의 배신적 타협이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 기아차 김종석 집행부의 사내하청 신규채용안 합의(기아판 ‘8·18 합의’)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에 대해 ‘직권조인한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이영주 사무총장의 5월 27일 국회 앞 농성집회 발언,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이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영훈 위원장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한 간부는 이 합의로 임금피크제와 성과 연봉제 등을 저지했다고 지켜세우기까지 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철도노조 좌파 활동가들이 부결 선봉까지 했던 인인

당시 한상균 선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부정확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좌파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영을 고쳐서는 안 되고, 이경훈이나 이종재처럼 노동조합 지도자가 조합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골적인 우파적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민주파·좌파 지도자들도 배신적 타협을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나라 노동운동 경험에도 낯설지 않다. 노동조합의 개선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가 동시에 투쟁을 제한하고 양보도 강요한다. 노골적인 우파 지도자를 좌파로 교체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장 조합원의 활동과 조직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다.

반대로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은 흔히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을 목표로 삼다 보니, 현재 집행부가 아니어도 노동조합 질서를 지나치게 존중하고 투쟁의 통제권이 노동조합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식은 노동조합 지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투쟁해야 할 때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전 위원장의 배신적 타협에 대한 대응이나 이경훈 집행부의 집단폭행 쟁의 주체가 될 것이라거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주장들

도 있다. 이런 주장은 대규모 사업장 정규 노동자들을 더는 투쟁의 중심이 아니라는 평가와 짝을 이루기도 한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요 세력이 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 비정규직 조직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령 이경훈 지부장의 파업 파괴 행위를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로 싸우자 매도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파업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경훈이 그것을 거스른 것이었다. 이는 노동조합 관료가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의 실리주의, 조합주의가 더 근저의 문제라는 식의 설명이

를 토대로 공적연급 강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근 후보 측의 사회연대전력이 공무원연금 양보론(공무원연금 양보를 통한 공적연급 강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작 해나.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비판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5월 투쟁 계획이 없는 동안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약영향을 주는 일련의 배신적 타협이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 기아차 김종석 집행부의 사내하청 신규채용안 합의(기아판 ‘8·18 합의’)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에 대해 ‘직권조인한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이영주 사무총장의 5월 27일 국회 앞 농성집회 발언,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이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영훈 위원장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한 간부는 이 합의로 임금피크제와 성과 연봉제 등을 저지했다고 지켜세우기까지 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철도노조 좌파 활동가들이 부결 선봉까지 했던 인인

당시 한상균 선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를 토대로 공적연급 강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근 후보 측의 사회연대전력이 공무원연금 양보론(공무원연금 양보를 통한 공적연급 강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작 해나.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비판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5월 투쟁 계획이 없는 동안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약영향을 주는 일련의 배신적 타협이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 기아차 김종석 집행부의 사내하청 신규채용안 합의(기아판 ‘8·18 합의’)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에 대해 ‘직권조인한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이영주 사무총장의 5월 27일 국회 앞 농성집회 발언,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이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영훈 위원장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한 간부는 이 합의로 임금피크제와 성과 연봉제 등을 저지했다고 지켜세우기까지 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철도노조 좌파 활동가들이 부결 선봉까지 했던 인인

당시 한상균 선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를 토대로 공적연급 강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근 후보 측의 사회연대전력이 공무원연금 양보론(공무원연금 양보를 통한 공적연급 강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작 해나.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개악안 합의를 비판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한편, 민주노총 차원의 5월 투쟁 계획이 없는 동안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약영향을 주는 일련의 배신적 타협이 방치됐다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이종재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 기아차 김종석 집행부의 사내하청 신규채용안 합의(기아판 ‘8·18 합의’)가 그것이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동요와 혼란을 보이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사회적 합의 문제는 이번 노사정 유 협상 결렬로 대안에서 배제된 듯한 착각이 들게 하지만, 노사정위를 우회하는 방식의 부분별·지역별 사회적 합의 기구는 계속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종료와 함께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와 실무협의 테이블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급 양보나 임금피크제 조건부 수용 같은 양보론을 논의하려는 듯하다.

이런 양보론은 흔히 계급 격차 축소를 통한 계급 단결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협소한 부문의 이해를 넘어 계급의 이익을 고민하는 진지한 활동가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의 동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소치로,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영국 노동당은 1970년대 중반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억제하는 “사회협약”(Social Contract)을 맺으려 했는데, 이때 그들은 더 나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합리화했다.

계급 격차 축소를 부르짖는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공무원연금이나 기업 복지를 사실상 방어하지 않고, 호봉제를 무너뜨리려는 임금체계 개악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맞바치는 식의 투쟁이 기득권 사수로 보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단결과 연대를 고취한다. 계급의 단결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비교적 균일하게 만드는 줄 초기적정 협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을 통해 이뤄 나갈 수 있다.

계속되는 박근혜의 공격과 6~7월 투쟁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추진하려 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들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진정한 목적이다. 끝이아 일반하고 요건 완화도 도입하려는 것을 보면, 정년 보장은 허울일 뿐인 임금 삭감 정책인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고는 그에 맞춰 일을 더 하고 임금을 더 적게 받으라는 것이다. 복지비를 줄이려고 더 산 보수에 더 오래 일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장년 탓으로 돌리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정부는 철도와 LH 등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계획도 내놔다.

이와 같은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조개악 ‘가이드라인’에 맞서 ‘즉각 총파업태세’를”를 촉구하고 나섰다(위원장 성명). 〈노동자 연대〉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일부 사항을 국회로 넘기고, 다른 일부 사항은 가이드라인으로 관찰할 때 노동조합이 흔히 중앙차원의 투쟁 전선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업장별 입단형 대응’과 ‘국회 대응’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태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반갑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국회 차원의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아직 그 상이 분명하진 않지만, 가이드라인 저지 투쟁이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대응에 매달리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국회 대응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에 기대는 것이기 십상인데, 최근 새정치연합이 밝힌 구상은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 모델

을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에서 새정치연합이 한 구실은 공무원노조를 붙잡고 양보를 강요하는 한편,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안을 새누리당과 타협하는 것이었다.

자칫 민주노총의 ‘대화’ 구상은 한국노총이 투쟁을 철회하고 어물쩍 협상장으로 돌아갈 명분을 주고, 국회 대응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민주노총 지지자 산별연맹 지도자들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투쟁보다 협상에 매달리라는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5월 투쟁이 힘겨웠던 탓에 6월 총파업 태세 구축이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다시금 금속 등에서 계획된 파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층 조직화에 나서야 하고, 6월 말과 7월 초 대규모 집회가 투쟁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0~11월을 보시오.)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최일봉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새로 등장했다. 10여 년 만이다.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좌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시하자면 첫째,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감원)을 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실업은 'IMF 공황'기였던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셋째, 복지가 축소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긴축이 시작됐다. 그 한 표현이 바로 공무원연금 공격이다. 상하수도에 민간 자본을 도입해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바로 긴축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긴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재정 불건전성'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특권'을 누려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지속으로 기업들로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진행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조세 수입은 무려 10조 9천억 원이 부족했다.

이윤율 회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자 공격이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의 핵심 쟁점도 사실상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었다.

이런 경제 상황과 공격은 노동계급에 상당히 위협적이고 노동계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경제 위기 심화 전에 노동자 투쟁이 고양되고 잘 풀렸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더 자신 있게 대처해 오히려 노동자 투쟁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들의 자신감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물론 자신감이 붕괴된 운동 침체기도 아니다.)

그래서 4·24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3분의 1 정도가 참가했다. 연가파업, 4시간짜리 파업, 또 소위 '간부파업'을 포함해서 말이다.(사실, 노조 '간부'는 상당수가 생산 현장에서 생산수단을 가동하지 않으므로 '간부파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형용모순이다. 이것은 노조 관료들의 용어다.)

조합원의 3분의 1이 참가한 경고

성 하루(또는 단시간) 파업은 사실 별 것 아니다. 자본가들의 신문을 봐도 알 수 있었다. 어느 자본가 신문도 민주노총 파업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한 것 말고는 '야 이거 큰일났다. 우리 이윤 왕창 날아가게 생겼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없었다. 그만큼 파업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4·24 파업은 민주노총 안에서 은근한 보이콧과 비협조에 직면했다. 중앙파 관료들과 국민파 관료들이 대부분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 전국회의 계열(NL 계열)과 좌파 계열만이 다소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그래도 27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니 이력저력 성공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4·24 '총파업'은 어중간했던(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적 조건에 비춰 보면 이력저력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 요구되는 투쟁 수위와 진정으로 필요한 이윤 파괴력에 비하면 별것 아닌 형식적 파업이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놀라지도 않았고, 파업이 끝나자마자 오히려 반격을 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 기아차노조 등의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합의안을 만들어 와 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사태를 목도했다.

경제 위기 지속에 동반하고 있는 정치 위기

1월 하순경 박근혜의 지지율은 29퍼센트로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박근혜 재임 2년 동안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물었을 때도 부정적 평가가 63퍼센트로 취임 후 최고 수준이었다.

게다가 성완종 게이트가 있었다. 박근혜 대선자금까지 문제 된 대형 부패 추문이었다. 전부터 〈노동자 연대〉는 이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 시대부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시대 친일파로부터 비롯한 극도로 썩어빠진 자들이므로 부패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임기 첫해에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항의 운동이 일어난 것에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에도 주로 부패 문제가 연관돼 있었다.

그런데 성완종 게이트에는 새정치연합도 연루돼 있었다. 사람들은 1990년대부터 민주당의 부패 추문을 봐 왔는데, 더욱 노골적인 경우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 이제 대중이 민주당(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상황에서 또 하나 살펴볼 측면은 우려한 대로 동아시아 긴장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의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가 미국은 이미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에서 일본을 한국보다 중시해 왔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어중간했던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서울광장에 모인 노동자들.

고 지적했는데, 이 점이 이번에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위선적으로 해 오던 미사여구마저 벗어던지고 이제에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까지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한국한테 일본과 동맹을 하라고 등을 떠밀며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남한의 지배계급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매우 분명하게 미국의 조치들을 지지하지만, 지배계급은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친미 입장만 노골적으로 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남한 지배계급의 입장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도 때때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다.

지금까지 간단히 요약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새정치연합 원편의 포퓰리스트들의 지지가 올라갈 법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새정치연합은 중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란 국민 가운데 반동적인 부분(독재 정권 잔당, 재벌, 공안 세력과 우익 등과 같은 집단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가로질러 연대(소위 말하는 사회적 연대의 의미)하자는 운동이다. 노동계급의 투쟁이 강력하지 못하니까 포퓰리즘이 지지를 많이 얻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부패에 연루돼 있고 썩어빠졌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정당으로 대중의 관심이 옮겨갈 법한 상황이다. 물론 진보당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력이다.(진보당은 강제로 해체됐지만 그 세력은 존재한다.)

이런 포퓰리즘 특세의 사례를 들어 보면 첫째, 최저임금 문제다. 당연히 〈노동자 연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지지한다. 좌파들도 모두 지지한다. 그런데 지지의 방식이 다르다. 적잖은 민주노총 좌파들이 최저임금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서 제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이다. 왜 그런가?

민주노총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뤄진 조직이고, 비정규직 조합원

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의 파업 요구 중 최저임금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다면 파업이 잘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현 정세에서 파업할 역량은 없는 듯하다. 자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생활조건보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등 더 열악한 처지를 배려한 다면서 국민적 호평을 받고 그래서 계급을 초월해 국민적(민중적 또는 '대중적popular') 지지를 받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이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했고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이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었다. 지배계급의 일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에 크게 영감을 받아 개혁주의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 제기했다. 이는 계급을 초월해 국민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이다. 물론 재벌들의 반대에 가로막히긴 했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적 조건에 비춰 보면 이력저력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 요구되는 투쟁 수위에 비하면 별것 아닌 형식적 파업이었다.

내다보아야 할 점들



융합 노동조합 쟁점들은 더 넓은 사회적·정치적 쟁점과 융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초 민주노총의 일부 상근간부들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 원을 부각시키자 순식간에 시민·사회단체 1백 몇십 곳이 지지하더라” 하고 뿌듯해 하며 말했다. 이것은 포퓰리즘적 사고이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투쟁을 전 투적으로 벌이면서 다른 노동자 부문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고무하는 것이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의 철도 파업이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듯도 했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소심함 때문에 그냥 암시로 끝났을 뿐이다.

포퓰리즘의 둘째 사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론이다. 공무원 연금을 좀 깎아서 국민연금을 올리자는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모순이다. 이런 일을 보면 좀 황당하게 느껴질 것이다. ‘아니, 공무원연금 깎아서 국민연금 올리자는 사람들이 왜 공무원연금 깎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에 나서? 무슨 속내일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게 바로 개혁주의다.)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지향은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다. 이것도 계급을 초월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다.

셋째 사례는 민주노총이 ‘성완종 게이트’ 혐의를 회피한 것이다. 과거에 민주당은 부패 추문에 크게 연루되지 않았으므로 민주노총 지도부도 민주당과 제휴해 정부·여당을 공격했었다. 그런데 민주당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 안에 파리를 틀

었고 그 안에서도 만만찮은 기반이 생기자 그들도 아주 썩어빠지게 됐다. 그래서 그들도 부패 사건이 터지면 영락없이 걸려든다. 민주노총 지도부 상당수가 성완종 게이트로 새정치연합과 제휴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아예 성완종 게이트 부패 추문 문제로 정부·여당 공격하는 것을 피하자는 식의 생각을 했던 듯하다.

산업화가 비교적 늦게 시작된 신흥국들에서 노동운동은 노동자주의(전투적 노동조합주의) 성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상호 스며들을 드러낸다. 이 상호침투의 효과는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에서 보듯이 개혁주의의 발전이다. 계급을 초월해 국민적으로 단결하자는 포퓰리즘은 계급투쟁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이 중심이 돼, 정치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이 통일된 노동계급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통일을 향하여

정부가 사용자들의 공세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경향이 빈번히 나타나는 장기 경제 불황 속에서는 노동조합 쟁점들이 더 넓은 사회적·정치적 쟁점들과 융합돼야 한다. 물론 이 방식은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과 민주노총 투쟁이 통일됐어야 했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형식적 접근,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노동자주의나 포퓰리즘 성향 그리고 이 둘의 상호침투 때문에 쉽사리 맞물리지 않을 가

능성이 컸다. 4·24파업의 요구들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관련 요구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노동계급 운동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노동계급이 천대받는 다른 사회집단들을 이끄는 일(그람시는 이를 ‘헤게모니’라고 불렀다)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1987년 6월항쟁은 처음에 학생과 청년이 앞장섰지만, 날이 갈수록 노동자들의 참가가 급속히 늘어, 1백50만 명가량이 시위에 참가해 정점을 이룬 6월 26일 쯤에는 압도적으로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은 서비스·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았고, 안양·군포 등지는 6월 10일 첫날부터 공장 노동자들이 안양 시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안양경찰서를 공격하기도 했다. 부산 같은 데서도 초기부터 사상공단과 사하공단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 면에서 보면, 즉 참가자로 보면 6월 항쟁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6월항쟁이 6·29라는 양보를 얻어 내면서 사용자에게도 맞설 자신이 생긴 노동자들은 7·8·9월 중순까지 투쟁을 벌였다. 그때 정치적 구호가 나오지는 않았다. 1988년이나 1989년에도 이런 점에서 약간 굵픈 면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강력해지면서 노동자 조직이 강화되고 이 노동자 조직들이 노동법 개정과 반민주악법 폐지, 부패 청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을 제출하고 싸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3년 김영삼 민선 민간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군부가 정치 일선에서 밀려났다. 군부독재는

1987년 항쟁으로 즉각 타도된 게 아니었다. 몇 년에 걸친 투쟁 속에서 역전될 뻔한 위험도 있었다. 1990년에서 1991년 사이가 그랬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 조직들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여했다. 이런 상황 전개는 1996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12일까지 지속된 민주노총 총파업 때 정점에 도달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같은 정치 문제에서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일부 초좌파 단체들이 지난해와 올해 세월호 항의 운동에서 그랬듯이 ‘박근혜 퇴진’을 앞세우지 않는 투쟁(파업 포함)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투쟁과 조직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메커니즘을 다소 피상적으로 이해한 결과다.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을 고취시키고 노동자 조직들이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은 사고의 출발점 자체를 사회 전체, 나라 전체에 뒤야 한다. 세계 경제 위기, 세계 제국주의 상황, 한반도(남북한 모두) 정치 상황 고려에서 출발해 그다음으로 자신이 처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우리 노동조합의 문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나라는 무슨 나라고, 사회는 무슨 사회냐’ 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걸려도 시야를 확대할 수 없다. 처음부터 세계와 국가라는 시야를 확보하려는 습관을 들여야만 자기 문제로도 제대로 싸울 수 있다.

맺으며

한상균 지도부의 정치적 약점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는 듯하다. 물론 그는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 포위돼 있다. 그러므로 그를 포함한 노조 지도자층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해서 그렇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니까 사용자들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과거에 양보했던 것마저도 되찾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철도 근속승진제나 서울대병원 노조원 자녀학자금 같은 문제들이다. 한때 양보했던 개혁도 회수해 가는 판에 교섭으로 새로운 양보를 얻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교섭 전문가들(노조관료와 개혁주의 정당 정치인)도 잘 알기 때문에 몸을 많이 사리는 것이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아니 좌파 지도부를 세워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올라가자마자 다른, 우파 지도자들과의 유대를 더 중시해 관료의 집단적 입장으로 융해되는데? 무엇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지지해야 하지?’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힘이 강력하면 관료 내부에 균열이 생긴다. 지금은 아래로부터의 힘이 강력하지 못해 관료 내에 균열을 충분히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참을성을 갖고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초좌파에 대해 레닌이 비판한 핵심 주장은 자본주의적 의회, 자본주의적 선거, 개혁주의 정당, 보통의 노동조합이 비록 혁명가들에게는 폭로됐을지라도 광범한 수만·수십만 노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그들을 폭로하고 신경질적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균형 있게, 개혁주의자들이 잘한 점은 잘했다고 말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되 입에 칼을 물고 웃으면서 그래야 한다. 대중에게 입증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그들과 공동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근본적 사회 변혁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저항을 아래로부터 조직하지 않으면 결국 노조 지도자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무원노조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자 몇 명이 잘 조직돼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총재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철도노조 같은 곳에서는 삭감 반대 네트워크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각성돼 있고 훈련받은 몇몇 반자본주의 투사들의 단단한 조직이 사업장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비상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조직이 존재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좌파 노조 지도자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며 기층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으로도 조직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미래를 위해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다. (▶ 8~9면을 보시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요건이었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맹비난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현재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박근혜 정권에 힘을 실어 줬다.

정부가 법률의 위임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에 떠넘겨 버렸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이 나섰다. 현재 판결 후 불과 일주일도 안 된 6월 2일,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효력 정지 여부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2심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적법 판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빠르게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 지위 잃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나오면 지난해 중단했던 조치들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5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단체교섭 중지, 사무실 퇴거 명령 및 지원금 반환 요구 등을 시사했다.

현재와 대법원의 판결은 이 나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얼마나 저열한지 보여 준다. 또, 이 기관들이 공평무사한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집단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저열한

현재와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의 전망을 낙관할 수 없게 한다. 현재는 선고문에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해직 교원 수, 그러한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쨌든 ‘자격 없는’ 조합원 문제를 노동조합이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가 결국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오히려 “해직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자 탄압을 강화해 지배계급의 이해

를 관철시키는 데 필사적이다. 4·24 민주노총 파업의 선진 부위였던 전교조를 위축시키고, 민주노총이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정부의 바람대로만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전교조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전교조 조합원의 69퍼센트가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저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원칙 있

는 결정을 보며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전교조 조합원 가입도 늘었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는 법률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무엇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다시 광범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 지도부는 6월 1일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와 분회 총회, 거리 선전, 1백만 인 서명, 국제 연대 조직 등을 투쟁 계획으로 내놨다. 그리고 6월 국회를 상대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세력 관계상 실제 개정을 목표로 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여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 합헌 결정을 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교원노조법 자체가 노동3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

또 2013년 10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앞두고 만들어진 연대체인 ‘민주 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도 활동을 재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하자.

사회적 여론 환기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4·24 연가투쟁 때 힘겨운 싸움을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에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정부 탄압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더 많은 비정규직” 노리는 박근혜의 공격은 진행 중

조명지

정부가 기간제·특수고용·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발표하려고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력, 업체 교체 시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 유지 노력, 원청 동종 노동자와 동등의 수준 임금 지급 노력, 특수고용 노동자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모두 비정규직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반대하고 있다. “노력” 조항이 대부분이라 처우 개선안이 실질적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2013년에 만들어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봐도 알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한 정규직은 진정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4퍼센트를 애초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더 열악한 고용 형태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1만 명이나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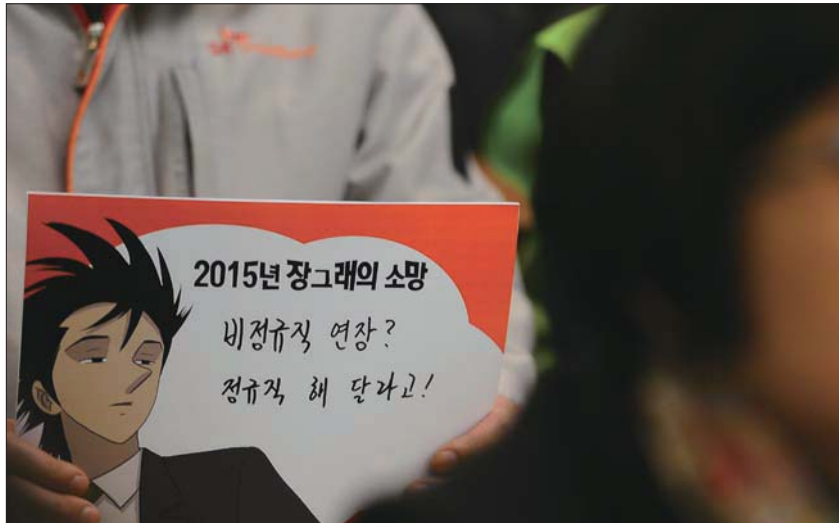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현행 지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부는 “민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그레놓고 노동부가 민간까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니 진정 유체이탈 화법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생색을 내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을 정당화하려 한다.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간담회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같은 날 연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반기 비정규직 공격의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보호”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공격하는 데 이용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불법파견 시비 때문에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며 원청의 산업안전, 직업훈련, 기업복지 제공 등을 불법파견 징표에서 삭제하려고 계속 시도해왔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 하반기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노동 확대 공격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가진 듯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자며 간담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초대했는데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노사정 논의의 명분으로 삼았던 한국노총 지도부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를 거부해 정부의 계획은 일단 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의 실제 3월 18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철되지 못했다.)

이미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노사정 협상 결렬 직후 “별도의 노사정 논의를 통해 8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2년으로 돼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4년까지 연장하고, 55세 이상과 “전문직·고위직”까지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70퍼센트에 달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겨냥하고,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에게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공격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공격에 맞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쌓아나가야 한다.

▶ 13면으로 이어짐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박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장별 입단협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델 개발과 컨설팅 지원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힘을 쏟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대비해 기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방식은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55~57세부터 임금이 낮아지고 삭감액도 첫째 10~15퍼센트 정도에서 시작해 마지막 해에 40~50퍼센트까지 점차 늘어난다.

이는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내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아갈 징검다리 구실도 할 것이다.

최근 국민은행에선 55세부터 임금

피크제와 희망퇴직을 동시에 강요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노동자들은 55세부터 임금을 절반 깎고 60세까지 일할 것인지, 직무를 옮겨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고 60세까지 일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퇴직'(사실상 해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성과급제 시행과 상시적 '희망퇴직'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공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고용 창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를 보여 주는 지표로 제시한 통계는 표본이 너무 적어 신뢰할 수 없다. 그조차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란 점을 볼 때, 고용 창출로 이어지리라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기업주들은 기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일부 저임금 비정규직을 사용하려 해 왔다. 민간부문에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기에, 소위 '전문가'들조차 고용 창출 효과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정부가 노조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결국 5월 28일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는 무산됐다.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불이익이 생기는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임금피크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

노동자들의 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서 장애물이 되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고령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해놓은 단협이 있는 곳에서는 취업규칙이 변경된다 해도 단협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선 임금피크제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늘어날수록 과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들의 압박을 견뎌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 개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7월에는 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발표도 예고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의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투쟁 체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정부의 법 개악 시도는 물론 가이드라인 공격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률만큼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취업규칙보다 단협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산별·사업장별 입단협에서 대응하는 식으로 투쟁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예컨대, 조직력과 단협을 가진 현대차지부도 취업규칙의 정기상여금 규정 때문에 지난해 통상임금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또, 당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주들을 적극 지원했는데, 민주노총이 중앙 차원의 대응 없이 사업장별로 각개약진하다 투쟁이 무기력하게 끝나 버렸다. 그러는 동안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한편,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임금피크제·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국회 공방도 가시화될 조짐이다. 노동계에서도 최근 한국노총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만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민주노총도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과의 협조로 국회 대응에 초점을 두게 되면, 투쟁보다는 야당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구실을 할 수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정부 공격을 막아 내기 어려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도 적용하려 한다. 더구나 이 당은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에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정부 개악 방향에 동의한 바 있다. 문제인은 2012년에도 노동계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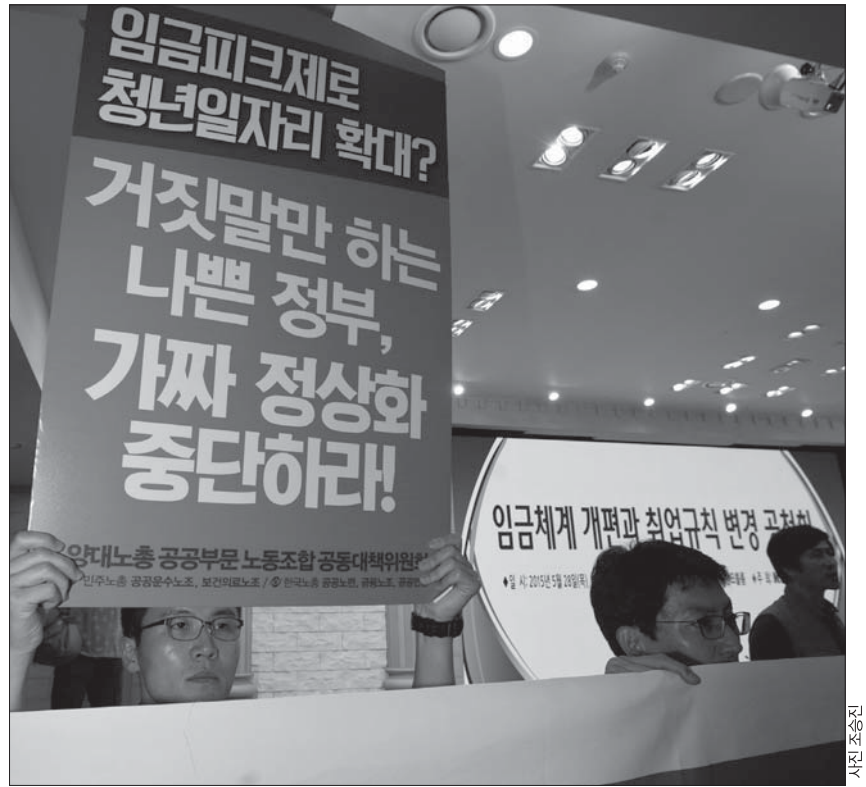
금 인상 자제 등을 촉구하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사회적 대화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을 사용해 투쟁의 힘으로 박근혜의 질주를 막아야 한다.

5월 29일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가이드라인에 맞서 즉각 총파업 태세를 갖추자" 하는 위원장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 주부터는 산별 대표자들이 농성을 시작하며 투쟁을 조직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시 파업으로 저지한다'는 결의를 해 둔 상태이다.

이 같은 결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파업 방침을 명확히 확인하고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임금피크제 5월 28일 공청회장 안에서의 항의 시위

▶ 12면에서 이어짐

노동시장구조개악 공격은 비정규직의 조건도 악화시킨다

현재 정부는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단협 시정 지침,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계급에 떠넘기기 위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격차를 내세워 정규직을 특권적 노동자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이간하려 한다.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결코 정규직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업

이 취업규칙을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거나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가뜩이나 노조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사측이 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취업규칙을 밀어붙이자 이에 항의해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음독 자살을 시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삼성이 재빠르게 편승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한 것이다. 이윤을 위해서 비정규직과 같은 열악한 일자리를 만들어 온 당사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려서 공격하겠는가?

따라서 정부가 지금은 비정규직에게 개선책처럼 보이는 것을 내놓는다

고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주들의 목적은 전체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벌어지는 정부 공격에 맞선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만약 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공격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전체 투쟁전선이 약화되면 정부는 하반기 비정규직 규제 완화 공격도 더 쉽게 밀어붙일 것이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박설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밤샘 장시간 근무(주야 10+10시간 교대제)를 강요하며 막대한 수익을 누려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밤에는 잠 좀 자자'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벌여 왔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이 속에서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2012년에 과도기적으로 8+9시간 교대제를 따냈다. 그리고 내년부터 8+8시간 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런데 지금 사측은 8+8시간 교대제가 도입돼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동조건을 후퇴시켜야 한다고 강변한다. 노조가 생산량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임금도 보전할 수 없다고 협박하면서 말이다. 생산성을 높여 손해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사측의 요구에 굴복해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노동조건 방어를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2012년 8+9시간 교대제 도입 당시 노동강도가 강해져 힘들어 하던 차였다.

이에 좌파 활동가들은 '현장공동투쟁'을 구성해 협상을 중단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전체 대의원 4백66명 중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양보안 폐기 등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5월 29일 양보교섭에 반대해 본교섭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기아차 노동자들.

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네 차례 본교섭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측과 노조 지도부의 양보교섭 시도를 막았다.

양보교섭

몇 차례나 교섭이 좌절되자 사측은 6월 3일 관리자 3백여 명을 동원해 활동가를 폭행하며 대열을 밀어내고 교섭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구급차에 실려 갔고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서둘러 합의안을 체결하고자 했던 노조 지도부도 사측의 만행을 막지 않았고, 활동가들에게 출입구가 가로막히자 도끼로 측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당일 교섭은 결국 5분도 안 돼 결렬되고 말았다. 사측이 "한 치의 양보는커녕 이전보다 후퇴된 불성실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노조 지도부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사측은 기가 살아 '우리는 아무 것도 내놓을 게 없다'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특히 당일 협상이 결렬된 데는 교섭장 앞과 현장에서 양보안 폐기를 주장하며 싸워 온 활동가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조합원들을 희생양 삼는" 소수 행동이라는 지도부의 비난과 달리, 이들의 항의는 노동조건 후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한 올바른 행동이었다.

실제로 '현장공동투쟁'이 최근 시작

한 양보안 폐기,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시간 교대제 도입, 대의원대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조합원 연서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교섭이 무산된 이후 기아차 화성공장의 지회 지도부는 이제 "노사공동위원회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조합원들의 원성을 들어가며 협의를 강행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그럼에도 양보안이 폐기된 것은 결코 아니다. 화성지회 지도부는 양보안이 문제라는 점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아차 전체를 포괄하는 지부 지도부는 사측에 "전향적 안을 제시하라"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금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양보안

을 갖고 일단 잠정합의하고 나서 조합원 총투표로 의사를 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수동화시키는 비민주적 태도다.

지도부는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지도부의 양보안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

특히 좌파 활동가들은 생산량 보전이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시간 교대제 시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이 요구가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살아 있을 때 요구를 바로잡고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1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해마다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생산량 보전을 요구하며 노동시간 단축 요구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틀어 버렸다. 정몽구는 2012년에 8+9시간 교대제를 논할 때부터 생산량 만회 방안이 마련돼야만

임금 보전도 가능하다고 버텼다. 물량 보전과 임금 보전을 연계시킨 것이다.

현대·기아차지부 지도부는 2012년에 이미 이런 사측의 논리를 수용해, 노동시간 단축의 전제로 노조가 생산량 보전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노동강도 강화와 휴게·식사·교육시간 축소 등의 후퇴가 이어졌다.

전제 조건

그러나 생산량 보전이 노동시간 단축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2009년 현대차 윤해모 지도부가 후퇴를 시작하기 전까지, 현대·기아차 노조는 생산량과 관계 없이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라고 요구하며 싸웠다.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

축은 기본 원칙이었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휴일·휴게 시간을 확대할 때도 이런 원칙이 적용됐다.

만약 사측이 생산량을 늘리거나 유지하고 싶으면, 스스로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들의 조건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많은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지금, 사측이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

아쉽게도 적잖은 좌파 활동가들도 생산량 보전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장공동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좌파 활동가의 일부는 생산량을 보전하면서도 노동조건 악화를 완화할 방안으로 설비투자를 주장다.

그러나 이 또한 노동조건 악화를 완

전히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사측은 라인 증설이나 공장 신축 등 투자를 늘리기보다 공장 가동 시간을 최대한 끌어올려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 이것이 현재 이윤을 뽑아내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사측은 해외 공장에서 8시간 근무를 도입했지만 공장을 최대한 가동시키기 위해 밤샘 근무조를 두고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눈치를 보며 한국 공장에서는 3교대제를 당장 도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현대차 변속기 사업부에선 밤샘 근무조 신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구나 사측은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는가 하면, 휴일 아르바이트생 투입 등으로 공장 가동률을 높

이곤 한다.

따라서 효과가 높지 않은 설비투자 요구에 매달리기보다 노동조건을 확고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르바이트생 투입과 밤샘 근무조 신설 등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설비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은 사측의 '물량 축소'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도 어렵다. 만약 라인 증설 등을 했다가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고용과 노동조건 후퇴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생산량 수준이나 투자 정도에 연동시키는 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임금은 생산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장 내 세력관계, 노조의 투쟁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박재순 건설노조 대의원 서울북부건설7계지부 조합원

전국건설노조가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6월이나 7월에 ‘총파업’ 투쟁을 해 왔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여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그 여세를 몰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자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돈을 건설업에 쏟아붓고, 지난해 말에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런데 올해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1백30만 원에 불과하다. 건설 노동자들은 1년에 평균 4개월 이상 실업의 고통을 겪는다. 설상가상으로 임금 체불이 만연하다.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안전에 대한 말은 무성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거꾸집 붕괴, 건설기계 전복, 무인 타워크레인 붕괴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그 결과,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에 두 명 꼴로 목숨을 잃는다.

얼마 전에도 양우권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플랜트 건설 노동자가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부실한 안전관리,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노동강도 강화는 건설 노동



저임금·체불 임금·안전사고가 만연한 건설 현장 강력한 상경 집중 투쟁과 지역 투쟁 모두 필요하다

자본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건설노조의 ‘2015 총파업’은 건설 노동자들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이를 위해 건설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임금 체불, 위험한 건설 현장, 상시적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노조 투쟁본부 회의에

서는 ‘올해는 상경 집중 투쟁을 생략하고 지자체와 각 건설 현장을 막는 투쟁을 벌이자’는 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안이 제출된 것은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상경 집중 투쟁이 팔뚝질 한번 하고 내려오는 일회적 행사’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2일에도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총파업 상경 집중 투쟁’을 하자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오리발을 내밀며 뒤통수를 쳤다. 이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불만과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총파업 상경 집중 투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건설회사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파업과 상경 투쟁을 벌여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고 불합리한 법을 고치며 인간다운 삶

을 쟁취해 온 조직이다. 전방위적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는 오히려 더 강력한 상경 집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현장을 멈추는 파업을 벌여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파업이 실질적이고 위력적이기 위해서도 ‘총파업 상경 집중 투쟁’으로 포문을 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토목건축, 전기원 분과 등에서 이미 지역별 임단협이 체결된 상황에서 상경 집중 투쟁으로 대정부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과정을 생략하면, 많은 지역에서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신규 조합원들은 상경 투쟁에 참가한 후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꼈다는 말을 종종 한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서 서로 투지를 고무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지역 투쟁도 더 힘차게 벌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투쟁으로 우리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정부 교섭이나 야당 의원들의 입에 발린 말로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악한 모습을 보이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칼끝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소속된 건설노조나 화물연대에게도 겨눠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경 집중 투쟁과 지역 투쟁을 모두 더 강력하게 벌여서 우리의 힘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강동훈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예를 들어, LH공사는 신도시·택지 개발과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을 접는다. 위기를 겪고 있는 민간 건설회사들이 주택 분양 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 기업에 넘기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와 관리비가 오를 공산이 크다.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는 저수지·하천 주변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면세점 사업은 최근 재벌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분야다.

회계 분리

또, 정부는 철도공사를 네 곳으로 쪼개 분할 민영화로 나아갈 길을 닦을 계획이다. 물류와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세 가지 부문의 회계를 분리해 2017년까지 책임사업부제로 전환한 뒤, 2020년까지 자회사로 분할하기로 했다.

철도 여객 부문의 민영화도 계속 추진된다. 인천공항철도를 국민·기업은행에 매각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부전-일광 노선의 운영권도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적자 노선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고 화물역 1백 27곳을 80곳으로 축소해 적자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지난 2013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거의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가 역대 최장인 23일 동안 파업을 벌이며

지연시켜 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이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한편,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심화하고, 외주화로 안전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노동자 5천7백 명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LH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8백 명과 2백50여 명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 정부는 “유지보수 적정 인력과 비용을 파악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히며,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에서 차량정비, 유지보수 업무 등의 외주화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에 철도공사에서는 근속승진제가 폐지됐는데, 사측은 분할 민영화와 외주화 과정에서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임금과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뿐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에 대

응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한국 지배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더욱 거세게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과 공공성,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위협하는 민영화에 맞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때 사회적 대화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철도 소위가 위험한 합의를 이끌어 낸 데서도 드러났다. 철도 소위는 철도 파업 종료를 위해 내놓은 정치권의 중재안이었는데, 이 소위는 “구분 회계 도입”, “강력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합의문에 담았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회계 분리를 전제로 한 사업부제, 대규모 외주화가 포함된 것을 보라.

또, 노사 대화에 기대를 거는 것도 위험하다. 철도노조 김영훈 지도부는 ‘화물 사업부제’ 도입이 ‘화물 자회사’

와 같은 민영화는 아니라고 보고, 철도공사가 제안한 이 제도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수반될 구조조정만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자회사 분할 전 사업부제 전면 도입을 통해 분할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려 나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영훈 지도부가 최근 시작된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또다시 기대한다면 이는 무망할 일이다.

노경 교섭이나 노사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벌여야만 거세지는 정부의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다.

사업부제

기업 내부를 몇 개 단위로 나눠 독립회사처럼 운영하는 관리조직의 하나다. 각 사업부에 수익성에 따른 평가를 강화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입해 왔다.





남중국해 분쟁

제국주의 간 경쟁이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다

김영익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짓고 있는 인공섬들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곳곳에 인공섬 7곳을 건설해 왔다.

이에 미국은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모래장성을 쌓고 있다”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맹비난했다. 이후, 미국 정부의 비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다가 5월 22일 부통령 조 바이든까지 나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항행의 자유와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시한대에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두려움 없이 일어설 것이다”고 말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공섬을 겨냥한 위험한 행동도 하고 있다. 4월 말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함께 1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5월 11일 미국 포트워스함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중에 한 곳인 용수자오 인근에서 해상 순찰을 하다가 중국 군함과 조우했다. 5월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까지 해군 정찰기와 함정을 들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20일에는 미군이 해군 초계기를 같은 지역에 정찰 비행을 보냈다. 이때 중국군은 미 해군 초계기를 향해 8차례나 경고 방송을 보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5월 30일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중 하나에서 무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이 “이동식 대포 2기”라고 보도했다. 중국군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인공섬을 ‘불침항모’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활주로 건설과 레이더 기지 배치 등 인공섬의 군사화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모래장성”

왜 남중국해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계속될까? 우선, 남중국해 해저에 묻혀 있는 막대한 자원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이 있다. 남중국해에는 석유 2백30억 톤과 천연가스 7천5백 세제곱킬로미터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이 지역이 차



자유아시아 방송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일본·필리핀 합동 훈련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물러서지 않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말라카 해협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역은 한 해 세계 상선의 3분의 1이 통행한다.

또한 남중국해 주변은 미국·중국·일본 등 강대국들의 경제적 이익이 상호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컨대 일본은 부품 등을 동남아로 수출하고 동남아 국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중국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져 왔다.

수출 위주로 성장해 온 중국은 이 바다를 미국이 장악해 온 점이 불만이었다. 중국의 석유 수입과 공산품 수출·출입의 대부분이 이 바다를 지나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유사시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 애써 왔다.

또한 남중국해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계획(아시아, 유럽 등을 잇는 육·해상 실크로드 계획)” 가운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적극 견제하려고 애써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에 군사력 배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는 동남아 국가들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했다.

지난 4월 말 미국은 일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서 지리적 제약을 없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초 일본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필리핀에 레이더 기술과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5월 25일 일본 방위상 나가타니 겐은 이렇게 말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협조해 미군의 경계·감시 활동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는 조만간 안보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제도 준비를 마무리하려 한다.

이처럼 미국·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맞대응은 앞으로 남중국해 등지에서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 최근 중국이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한 것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한 것이다. 지난 5월 26일 중국은 국방백서를 내면서 육·해·공군의 작전 범위를 넓히고 해양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이전보다 공세적인 군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7월에 호주와 태평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일본·중국 등이 치열하게 벌이

는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다. 이 경쟁 때문에 남중국해 등지에서 계속 긴장이 쌓여 왔다.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치열한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일본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이라는 도박을 감행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긴장이 쌓여 가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공구역을 선포해 긴장이 순식간에 고조될 수도 있다. 또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그리고 그 충돌 때문에 긴장이 더 커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박근혜는 대미·대일 군사 협력 중단하라

6월 3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니얼 러셀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 한국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아마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를 아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에게도 한미 동맹을 통해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석유 수입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의 하나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를 포함시켰는데, 이때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 역내 안보환경의 사례로 남·동중국해 분쟁을 꼽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하는 등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논란이 돼 온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은 6월 3일 사정거리 5백

킬로미터 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II B 개량형)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이 실험 미사일은 올해 말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일본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 갈등이 커지면서, 서해(한반도) - 동중국해 -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지역은 위험한 발화점이 돼 왔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대미·대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설수록, 그만큼 동아시아 전체와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